
2005총선 이후의 중일관계

손기섭(서울대)

1. 자민당 압승과 동아시아 외교

2005년 9월 11일에 실시된 제44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는, 자민당 296석, 공명당 31석, 도합 327석으로 중의원 전체 2/3를 뛰어넘은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정도의 놀라운 결과였던 바, 미디어전략의 귀재이자 여론몰이의 명수인 고이즈미의 '극장형 선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었다.

총선거의 승인으로서는 첫째, '우정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개혁과 반개혁으로 몰아붙인 총선 쟁점의 명료화, 둘째, '고이즈미 칠드런'으로 명명된 유명여성과 명망가로 구성된 '자객'공천으로 설 새 없이 쏟아낸 미디어전략, 셋째, 공명당과의 치밀한 선거협력 등으로 분석된다. 선거 승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민당이 선거쟁점을 우정사업의 민영화란 단일 쟁점으로 몰아간 데 비해 최대야당 민주당은 소위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선거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제대로 선거관세를 읽지 못한 가운데 선거쟁점을 전혀 유리하게 부각시키지 못했다. 즉, 고이즈미의 동아시아외교 실패와 재정적자, 연금복지문제 등을 선거쟁점화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듯 고이즈미 수상은 중일관계의 누적된 악화와 한일관계의 급냉으로 대표된 동아시아외교의 실패를 전혀 선거쟁점화하지 않고서 기민하게 승리했던 것이다. 압승 결과에 고무된 고이즈미 수상이 앞으로 악화되어 있는 대중국외교, 나아가 동아시아외교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국내외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이 되었다.

2. 고이즈미 내각기의 중일관계 갈등 격화

1998년 '장쥘민 방일' 이후 경제적 협력과 외교적 견제를 반복하면서 선택적 협조와 경쟁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던 중일 정치경제관계가, 고이즈미 수상의 계속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기로 갈수록 경직되어, 2004년도 들어 더욱 악화일로를 걸었다.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이 가

사회화되었고, 각종 현안문제가 담보하면서 양국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중국측에서 보면 고이즈미 내각의 역사인식의 미흡으로 기분이 나쁜 차에 2003년 여름 경부터 구 일본군 독가스사고에서부터 2004년도 센카쿠열도 영유권분쟁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민의 대일 여론 악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2005년도 들어서는 여기에다 동중국해 해양자원 조사문제의 갈등을 비롯하여 교과서 왜곡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문제까지 겹치고, 대규모 반일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 발생함에 따라 중일관계는 '72년 체제' 하에서는 상상키 어려운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중일관계에서 이러한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갈등의 증폭은, 이제 더 이상 중일관계가 '72년 체제'의 안정된 제도적 틀 안에 머물고 있지 않음을 입증했다.

첫째,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중국정부의 불만과 반일시위를 둘러싼 갈등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중일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최대 현안 과제이고,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5년 4월의 중국 국내의 심각한 반일시위에 봉착했다. 고이즈미 수상은 수상으로 재임 중에 야스쿠니신사에 네 번의 참배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번씩 참배했다. 고이즈미는 아직까지 야스쿠니참배를 그만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중국정부는 계속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고 고이즈미의 공식 중국 방문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004년 2월 이후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것에 저항감이 없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고이즈미 수상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조와 중국 고속철도의 신칸센 수주와 관련해 중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이 문제로 고이즈미 방중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다. 중국정부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및 리자오싱 외상,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고이즈미 일본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중지를 요구했으며, 반일시위 격화의 원인이 일본에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반일데모로 입은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2008년도를 시한으로 대중 엔차관 협력의 중단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반일 시위 자체는 4월말을 넘기면서 중국정부의 폭력적 시위 단속으로 수습 국면을 맞이했다. 이러한 데는 중일 양국의 두 번에 걸친 외상회담 및 4월 말의 후진타오-고이즈미 정상회상의 실현에 힘입은 것이었고, 또 반일시위의 국내정치화를 우려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의한 결과였다.

둘째, 센카쿠 영유권 및 해양자원 개발을 둘러싼 중일 양국의 갈등이 격화된 점이다. 중일 간에 영토 및 자원문제는 센카쿠열도 영유권문제와 동중국해 천연가스 자원발굴 문제이다. 1978년 후쿠다 내각기에 중일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그동안 잠복해 있던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이 2004년도 경부터 현안 쟁점으로 등장하여 중일 양국간의 중대한 외교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중일간의 영토 및 영해 영유권문제는 현재 센카쿠열도 영유권 자체의 문제와 동중국해 해양자원조사문제의 두 문제로 나뉘어 전개되는 양상이며, 2005년도에는 주로 중국정부의 동중국해 주변 해역의 천연가스 해양자원 조사를 두고 양국의 신경전으로 비화했다.

특히, 2004년도 이후 동중국해 천연가스 발굴을 두고, 중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8월경부터 중일 중간수역에서 춘효(春曉), 단교(斷橋) 의 두 천연가스전을 개발중임을 표면화시켰고, 이에 대항하여 일본정부는 2004년도 7월부터 동 수역 주변의 지층구조를 입체적으로 조사해왔다. 일본정부는, 2005년 4월 '중국의 춘효(春曉), 단교(斷橋) 두 천연가스전은 일본측과 연결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측에 자료의 제공과 개발중지를 요구했다. 중국측의 반응이 없자 경제산업성은 4월 13일 일본 민간기업이 신청한 시굴권을 인가하는 수속에 착수했으며, 실제적으로 2005년 7월에 '테이코쿠 세키유'(帝國石油)에 시굴권을 부여했다. 일본 외무성은 일중관계의 혼란 요인 추가를 이유로 소극적이었지만, 고이즈미 수상관저는 중국에 굴복할 수 없다며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셋째, 일본의 대중 엔차관 감액과 중지를 둘러싼 갈등이다. 1979년도 오오히라 내각기에 처음 결정되어 제4차 엔차관 팩키지를 거쳐 현재 단년도 베이스로 제공되는 대중국 엔차관협력은 2005년 4월 17일에 열린 중일 외상회담에서, 마치무라 일본외상이 중국 리자오싱 외상에게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종결할 것을 통보했다. 2001년도 이후 대중 엔차관의 감액 및 불요론의 대두와 관련된 양국의 갈등도 깊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2000년도 이후 일본정부는 대중 엔차관 제공과 관련하여 매년도 단위의 공여, 환정보전과 인재육성 안건 중시, 일본 국익 중시, 대중 외교카드인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대중 엔차관은 3년 연속 20% 정도 감액된 바, 14년 만에 1000억엔 이하로 떨어졌으며, 일본의 대외원조 총액에 있어서도 1위에서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로 떨어진 것이다. 일본정부는 재정난으로 정부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하는 가운데,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엔차관 원조 공여 비판을 수용했으며, 이를 어느 정도 외교카드화 했다. 일본의 ODA 전략 전체가 '국익'과 '국제공헌'과의 균형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중 엔차관 원조는 수정과 재고의 비판대에 올랐던 것이다.

넷째,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한 갈등이 2005년에 증폭되었다. 일본정부는 2005년도 유엔 안보리 확대 개혁안을 G4와 연대하여 제출하고자 함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의도했지만, 거의 실패로 끝났다. 미국이 대폭적인 유엔 상임위 개혁에 소극적이고,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 각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G4와 AU와의 연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대표성을 강조했다지만, 가장 중요한 한국과 중국과의 교감이 없었다. 일본 외무성의 니시다 외무심의관은 8월 24일 방일한 우다웨이 중국 외무차관과 회담하면서, 일본의 개혁안에 대한 중국의 저지노력에 대해 너무 심한 네거티브 활동은 일본 국민감정을 해친다며 비판했다. 일본은 미국, 중국 및 반G4과가 유엔개혁의 기간설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 노력을 거의 접었으나, 제2위 규모인 유엔분담금의 삭감을 외교수단화 할 의도를 보인다.

다섯째, '중국위협론' 대 '일본 군국주의론' 갈등이다. 일본정부는 2004년도 12월에 발표된 '방위계획대강 제2차개정' (신방위계획대강) 및 2005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과 방위비 증대 및 핵능력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기했다. 일본의 2005년도 방위백서에 '중국의 위협'이 명시됨에 따라, 중국 외교부는 이것을 '완전히 근거없는 것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양국의 의심과 대립감정을 조장하여 중일관계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정부가 직접 일본 군국주의론을 펴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국내의 반일감정이 악화된 바, 이것이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움직임이다. 중국의 한 포털사이트(SINA) 특별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첫인상으로, 80%의 응답자가 '위험한 군국주의국가'를 들고 있으며, 약 60%가 에너지자원을 두고 새로운 중일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3. 2005년 총선 이후의 중일관계

첫째, 일본정치시스템이 소위 '55년 체제'에서 '2003년 체제'로 전환 재편됨에 따라, 고이즈미 수상의 동아시아 외교노선도 일본정치의 '2003년 체제'적 신보수분류의 정책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민당과 사회당의 보혁대결구도로 특징지워진 일본의 '55년 체제'는 2003년도 11월의 총선에서부터 '2003년 체제'로의 전면 전환을 보인 바, 2003년도 말의 중의원선거와 2004년도 여름 참의원선거 이후 일본정치는 여야간 대립축이 이념 중심에서 점차 정책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는 점, 정당형태 면에서 자민당 우위의 다당제에서 자민-민주 중심의 2와 1/3정당제로의 점진적 수렴, 정권유형 면에서는 자민당 우위의 연립내각 구도, 선거제도 면에서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의 특징을 보였다.

중요한 점은 이 '2003년 체제'에서 일본의 대외정책노선이 중요한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 자민당과 연립여당의 정책방향성이 평화헌법의 개헌, 미일동맹의 강화, 전수방위의 수정과 실효적 방위력 구상, 안보리 상임위외교 지향 등 신보수분류적 정책노선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점이다. 중일관계에서는 전후적 '특수관계'인 중일 '72년 체제'에서 탈전후적 '보통관계'로서의 중일 '2005년 체제'의 속성을 명백히 했다. 이는 중일관계가 더 이상 70-80년대적 전후적 특수관계로서가 아니라 21세기적 일본의 '국익'의 관점에서 선택적 경쟁과 협조를 병행하면서 중일관계를 상대화 내지 보통화시킨다는 의미이다.

둘째, 고이즈미 압승으로 결론난 2005년도 총선 이후의 대중외교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탈전후적 보통관계로서의 중일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내각은 강화된 정치주도권을 바탕으로 중일간의 상당한 정치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안보리 상임위외교를 추진하며 국내적으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 지금까지 고이즈미는 중일관계에서 아베 간사장 대리, 이시바 방위청 장관, 마치무라 외상 등의 보수강경파들의 노선에 힘을 실어 주었으며, 정치신념도 신보수분류의 강경노선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재의 중일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상기 갈등적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쟁점 사안에 따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체나 차관급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때는 장관급 정치가들이 나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일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그 기폭제는 단중기적으로 두 쟁점, 즉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와 동중국해 천연가스 개발문제에서 비롯될 것이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계속을 고집하는 아베 신조 전 자민당 간사장의 강경발언이나, 나카가와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자민당 내 보수 강경그룹의 영향력과 반발이 여전하며, 고이즈미로서도 새로운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독불장군식 독심을 가진 고이즈미의 정치적 신념에 의거한 것이며 또한 고이즈미 내각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킨 고이즈미 수상으로서 고이즈미 제3차내각을 구성한 이후 10월 하순경 전격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다. 11월에는 부산에서 APEC회담이, 그리고 12월 연말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11월 내지 12월 참배는 더욱 곤란할 수 있다.

넷째, 동중국해 천연가스 개발문제는 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영토문제와 직결되며, 또한 양국간에 가장 중요한 국익인 에너지자원의 획득과 개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자국 영해 안에서의 개발이란 명분으로 천외천(天外天), 춘효 유전 등에서 개발을 강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테이코쿠 세키유에 시굴권 부여하고, 구체적 시굴작업 강행을 검토하는 미묘한 시점이다. 현재의 외무국장급 협의에서는 별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 못한 바, 앞으로 새로운 정치적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쩌면 중일 간에 외무, 국방, 경제산업 담당의 장관급으로 구성된 '3+3'의 장관급 협의체가 구성되어 정기적 협의를 할 가능성이 타진될 수 있겠다. 중일 간에 해양자원을 두고, 자칫 감정적 외교전으로 비화하면, 양국간의 민족주의 고조로 반일시위, 반중감정의 팽배를 몰고 올 것이며, 소규모 제한적 군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한편으로 고이즈미 압승은 남은 1년 남짓의 잔여 임기 동안 동아시아외교의 정책 선택의 폭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바, 역설적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대북한 외교 및 대중국 외교의 전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 북한외교의 경우, 2006년 중반기 경 제3차 방북을 통해 전격적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다. 2002년 9월의 고이즈미 제1차 방북 시 '북일 공동선언' 및 국교교섭의 세부적 내용합의는 일본외교의 승리라고까지 선언할 수 있는 성과였고 납치문제가 아니었다라면 80%를 상회하는 국민 다수가 지지했던 것이다. 9월 하순 이후의 제3차 6자회담 합의 후에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증폭되었다. 따라서, 고이즈미 수상은

내각의 대표적 업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북일 국교 실현의 업적에 예상외로 상당히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고이즈미 신내각은 악화된 중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하며, 잔여 임기 1년 동안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한정적 중지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전몰자 추도시설의 건립 구상, 중일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 동중국해 해양자원 개발의 정치적 협의와 타결 모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40% 이상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리자오싱 외상, 원자바오 총리, 주일 중국대사 등이 끊임없이 야스쿠니 참배의 중지를 요구하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언어적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국내 여론의 다수도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4. 중일관계 전망과 한국에의 함의

고이즈미 신내각은 기본적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중일관계의 상대화 내지 보통관계화를 시도할 것이다. 중일관계의 현재의 갈등 국면은 심각한 상황이나, 단중기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다. 고이즈미 수상의 방중 및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일이 상호 거부되는 여건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에 대한 해결 구도는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 참배를 중지하고 좀더 유연한 동아시아외교를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 말하자면 야스쿠니신사의 A급전범 분사나 혹은 새로운 전몰자 시설의 설치로 야스쿠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중일관계의 안정적인 초석이 될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고속철도 계획, 고이즈미 방중, 북핵문제와 납치문제 해결 등에 중국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일본의 경제협력 획득과 미일관계에의 견제, 'ASEAN+3'에의 협조를 위해서도 현재의 갈등 국면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중일관계 변화의 세부내용에 유의하면서도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학적 변화를 잘 분석하여 동북아 평화의 확보와 한반도 통일에의 가능성을 여는 단기적 및 중장기적 외교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중일 갈등이 결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중일 양국에 대한 외교역량과 정책 선택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 영역은 적어도 2020년까지는 기존의 한미일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적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동북아 안보대화기구', '동북아 SUMMIT'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2005년 10월 13일 미래전략연구원>